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 사 건 명 15-학인-00040 자기운명결정권 침해 등
- 신 청 인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 피 해 자 1.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2. ▯▯▯(▯▯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3.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4.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5. ▯▯▯(□□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피 신 청 인 ●●(□□여자고등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진학을 앞둔 피해자 1., 2., 3., 4.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및 진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3., 4., 5.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5.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 5.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한다.

나. 위와 같은 학생인권 침해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여자고등학교장에게,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실적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낮은 인권감수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학교구성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7. 28.(화)

나. 신 청 인 :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다. 피 해 자 : 1.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2. ■■■■(■■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3.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4. ■■■(■■ △△고등학교 2학년 재학)

5. ▧▧▧(▣▣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라. 피신청인 : ●●(▣▣여자고등학교 교사)

마. 신청요지

피신청인이 피해자 1., 2., 3., 4.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면제 등을 약속하면서 위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여 피해자 1., 2., 3., 4.의 행복추구권 및 진로선택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 1., 2., 3., 4., 5.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2.] 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별지1.] 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신청인, 피신청인과 피해자들 및 그 학부모들의 주장, 참고인의 주장, 면담 내용, 녹취기록 및 관련 서류 등에 따르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2014.경 피신청인은 플로어볼 클럽활동을 하면서, ○○여자중학교 플로어볼 동아리 활동을 하던 피해자 1., 2., 3., 4.를 알게 되었다.

2) 2014. 11.경 피신청인은 ○○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1., 2., 3., 4.에게 기숙사비 면제, 교육비 면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하여, 위 피해자들은 위 학교로 진학하였다.

3) ■■여자고등학교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2014. 12. 1.~12. 5.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았고, 같은 달 24. 합격자 발표를 하였으며, 신입생 입학 등록기간은 2015. 1. 22. ~ 1. 27.이었다.

4) 2015. 2.경 피신청인은 ■■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피해자 1., 2., 3., 4.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였다.

5) 2015. 2.경 피신청인은 교장과 면담한 후, 피해자 1. ~4.에게, “내가 학교에 물어보니까 학교에 기숙사비 면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1., 3., 4.에게는 자신이 통학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 2.에게는 피해자 2.가 ☒☒ 외곽 지역에 거주하여 자신이 통학시켜주기 어려우니, 기숙사비 50%를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 1. 3. 4.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피해자 2.는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냐”고 말하고,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한 후, 2015. 3. 3. ▲▲여자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6) 피해자 1., 3., 4.는 2015. 3.부터 4. 중순경까지, 피신청인의 차를 타고 ☒☒에서 ■■으로 통학하였다.

7) 피해자 1., 3.은 2015년 6월부터 학교 자체 감면으로, 피해자 4.는 2015년 5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면제’로 수업료 지원을 받았다.

8) 2015. 3. 경 피신청인은 피해자 4.에게, ‘피해자 4.가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학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3월 안에

전학가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3.의 태도를 문제 삼아, “야 이 ▼ ▼야 너 태도가 왜 그래”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5.에게, ‘피해자 3., 4.가 싸가지가 없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3.의 어머니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9) 2015. 8. 17. 피해자 3., 4.는 △△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

10) 2015. 8. 29. 17:10경 피신청인은 ■■■여고 △△관에서 피해자 5.에게,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 ‘자신이 욕설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1-5-나)항 참조)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조례 제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조례 제16조는 학생에게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1)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이 전제되는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정되고, 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인 선택,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사항,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 및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¹⁾

그러므로,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학교로 진학할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진학은 학생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이 진학을 결정할 때 학생의 현재 상태(성적, 생활 등)를 고려하고, 진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결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 2)와 관련하여, 2014. 11. 피신청인은, 당시 ○○여자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1., 2., 3., 4.(플로어볼 선수로 2014. 7. 20. 전국초중고플로어볼 협회장기 대회 준우승을 함)에게, ■■여자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교육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플로어볼 운동장비 지원”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1)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결정의 주체인 당사자에게 발생함.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각종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행사하여야 함. 본 결정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피해자 1. ~ 4.의 주장,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의 주장 및 참고인 ㉠㉠㉠의 주장이 일치하고, 둘째, 피신청인이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위 인정사실 4), 5), 6), 7)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셋째,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약속 외에, 피해자 1. ~ 4.가 굳이 ㉠㉠에 소재하는 ○○여자중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여자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넷째, 위 인정사실 8)과 같은 갈등상황은 피신청인의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면제,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2014. 11. 피해자 1. ~ 4.에게 지원을 약속한 것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임의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가 되었다면, 피해자 1. ~ 4.가 ■■여자고등학교에 합격하여 등록(2015. 1. 22. ~ 1. 27.)한 이후, 피신청인이 학교장에게 피해학생들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인정사실 4)항 참조), 또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발생하였으며(인정사실 5), 6)항 참조), 피해학생들의 학비 지원의 문제도 발생(인정사실 7)항 참조)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인정사실 5), 9)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2., 3., 4.가 ■■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된 것은(피해자 1.은 현재까지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운동을 그만 둬), 피신청인이 학교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피해학생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사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 1., 2., 3., 4.의 행복추구권 및 진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

교사가 학생에게 ‘전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 상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압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위 인정사실 8)항의 피신청인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4.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4.와 상담을 하여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생활교육을 해야 함에도, 상담을 하지않고 ‘피해자 4.가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학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3월 안에 전학가라”고 말하였고, 당시 지원문제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피해학생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말한 것은 피해자 4.에게 진로 상담을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폭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피해자 3.에게 사용한 “▼▼”²⁾라는 단어는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자 3.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피해자 3., 4.를 지칭하면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한 것은, 위 피해자들이 ‘버릇이 없다’ 또는 ‘감히 너 따위가’ 등의 의미로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신청인이 위 피해자들을 비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5. 7.경 피해자 3.의 어머니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피해자 5.에게, ‘피해자 3.의 어머니를 지칭하면서 “xx년”, “그년”, “내가 배를 따버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첫째, 피해자들의 진술 및 기록에서 피신청인이 상당수의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둘째, 피해자 5.와 피신청인의 대화 녹취록 상에 피신청인이 피해자 3.의 학부모에 대해 “내가 욕을 해버렸어”, “이 xx 년”, “그년”, “싸가지 없는” 과 같은 말을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들의 주장이 피신청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2) “피신청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상적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라 함은, “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 ② ‘자식(子息)’을 얹잡아 이르는 말. ③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사용한 것은 ③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욕설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14-학인-00001 2015.1.16. 결정)

은 위와 같이 피해자 3.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자신의 부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전해 듣는다면,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학생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말을 직·간접으로 듣게 된 피해자 3., 4.는 이로 인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5.는, 자신과 플로어볼 동아리를 같이 하는 후배인 피해자 3., 4.와 피해자 3.의 어머니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모욕적인 말과 욕설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므로, 비록 그것이 자신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피해자 5.가 들은 내용과 피해자 5.와 피해자 3., 4.와의 사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5. 역시 피해자 3., 4.처럼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 피해학생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의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하고, 양심형성의 자유는 양심의 형성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로서, ①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 표명의 자유), ②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③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결정)

위 인정사실 10)항의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 5.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부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탁’은 실제로는 ‘강요’라고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이 피해자 5.와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고맙게 볼 거야”, “너한테 피해가 안가” 등의 표현은 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죽어버릴까”, “아파트 뛰어내릴까” 등의 표현은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피해자 5.에게 조사받을 때 피신청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 5.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 5.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인권감수성 관련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유치하고 나서 해결하면 된다는 관행에서 온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당초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폭언으로 이를 무마하고 봉합하고자 한 피신청인의 대응 태도 역시,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고 실적과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12.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별지 1]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생략

[별지2]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게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